

## 제7회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18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 엘가커피에서

### 1. 미국의 헌법(1787) 계속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통과세(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국가는 없다.

어떠한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두 나라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미국에 봉사하는 사람은 미국의 정체성만이 허용된다.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유급 또는 위임에 의하여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여,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각 주의 독립적 성향을 인정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동시에 중앙의, 연방정부의 권한 또한 명시해 놓았다.

통상이나 세입과 관한 규정에 의해 어떠한 주의 항구에 대해서도 다른 주에서 의무적으로 입항시키거나, 출항 수속을 하거나, 관세를 지불케 할 수 없다.

제10항, 어느 주도 어떠한 조약, 동맹관계, 또는 연합관계를 체결하지 못하며, 나포 허가증을 수여하지 못하며,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금화 및 은화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채무 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자격 박탈법이나 소급법이나 계약상의 채무를 훼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또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룰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나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 보호,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자이자, 헌법이 형상화된 헌법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의 하위 법들이 있듯이 미국 대통령의 하위 관리들은 대통령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제3항, 대통령은 -중략-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유의하고 미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그 나라의 최고 법규가 된다. 헌법을 가진 국가 간의, 헌법 끼리의 체결이기에 최고 법규의 대우를 받는다. FTA가 그 예인데, FTA는 국가 간 상거래에서 최우선 적용대상이다.

이 헌법과 헌법을 이행하여 제정되는 법률 및 미국의 권한 하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 법규이다. 모든 주의 법관은 이 법규에 구속되며,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와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 2. 제임스 매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10(1787). The Federalist Paper: Federalist No.10.

-민주 정부에 대한 위험성을 논할 때, Federalist Paper에서 주로 인용되는 문구이다.

민주 정부의 친구는 민주 정부가 가진 위험한 악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 정부의 성격과 운명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놀라지 아니한다.

-공화정신, 공적이익에 관한 글이다.

가장 사려 깊고 고상한 시민들과, 공적 신념과 사적 신념의 친구들과, 공적 자유와 사적 자유의 친구들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경쟁 정당 간의 갈등 속에서 공익이 무시되고 있고, 정부의 조치가 정의의 법칙과 소수당의 권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해 당사자이자 고압적인 다수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취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도처에서 비난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초조하게 이러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기를 바랄지라도 알려진 사실의 증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통의 일부를 정부의 활동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비난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다른 원인이 우리의 가장 중대한 여러 불행뿐 아니라 특히 대륙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메아리치고 있는 공공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또 더 커지고 있는 것과, 사적 권리에 대한 경고를 초래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당파적 정신이 불안정성과 불의로써 우리의 공공 행정을 오염시킴으로써 초래한 유일한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된 결과는 될 것이다. 나는 파벌을 여러 시민이 전체의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관계없이 공통의 열정이나 이익으로 뭉치고 고무되어 다른 시민들의 권리나 공동체의 항구적이고 총체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

자유와 파벌의 관계를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은데, 공기가 없으면 불은 순식간에 꺼지게 된다. 그러나, 파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치생활에 필수적인 자유를 없애는 것은 공기가 불에 파괴의 힘을 준다는 이유로 동물의 생명에 필수적인 공기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